

# 장고 끝 악수됐나...광주 복합쇼핑몰 '빨간불'

### '국가지원형' 구상에 국힘 냉담 트램 등 'SOC 끼워넣기' 도마 사업자 특혜시비·말잔치 혹평

광주시의 복합쇼핑몰 유치 행보에 빨간불이 켜졌다.

전국적 관심을 모은 여당 지도부와 만남에서 국가지원형 복합쇼핑몰이란 개념을 야심차게 꺼내들었지만, 정작 트램 등 SOC 분야가 도마에 오른데다 공감을 얻지 못하는 사업 설명 등으로 인해 말 잔치만 벌였다는 혹평마저 쏟아지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 18일 국민의힘과 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지역 현안들을 설명하고 당 차

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협의회는 국민의힘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순회 실시하는 권역별 예산정책협의회 중 첫 번째 자리로,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김성원 예결위원회 간사 등 여당 지도부가 대거 참석하면서 이목이 집중됐다.

광주시는 이 자리에서 대선과 지방선거를 거치며 지역 최대 이슈로 떠오른 복합쇼핑몰과 관련 "광주에 들어설 쇼핑몰은 국가지원, 민간 자본, 지자체의 신속 행정이 시너지를 내는 '대한민국 No. 1 메타N-복합'이라"며 "민간의 수익성과 공공의 공공성이 공존하는 모델로 '톱 오브 더 톱(Top of the top), 상생·연결·투명'의 핵심 가치를 지향하는 전에 없던 형태"라고 설명했다.

광주시는 특히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위한 디지털 기반 광역통합유통센터(3,000억원)와 트램·도로 등 연결망 구축(6,000억원)을 위해 9,000억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강기정 시장이 국민의힘과 만남에서 방향성과 청사진을 밝히겠다고 예고하는 등 이날 협의회를 통해 쇼핑몰 건립에 속도를 내겠다는 광주시의 복안이 담겼지만, 협의회 직후부터 특정업체 업무 등 뒷말들이 나오면서 되레 사업이 꼬이는 형국이다.

9,000억원의 예산지원이 복합쇼핑몰 유치에 대통령 공약, 국정과제에 포함된 점을 활용해 SOC 확충을 꾀하려는 의도로 풀이되지만, 규모나 내용 면에서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시민 논의나 합의가 없었던 트램이 다른 교통

망과 함께 국비지원 대상으로 등장해 의아스럽다는 반응까지 나왔다.

트램에 국한하지 않고 향후 복합쇼핑몰 입지에 따라 트램, 도로, 지하철 등을 선택적으로 확충하면 시민 편의를 제고할 수 있다는 광주시의 입장과 달리 사업자 측에 혜택만 주는 것이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통상 복합쇼핑몰 입점을 위한 난제인 접근성, 교통 환경 영향 문제는 물론 광역 유통센터로 소상공인과의 갈등까지 시에서 해결해주는 셈이어서 특혜 소지를 키울 수도 있다.

'세대·분야·시간·공간'을 연결하는 복합쇼핑몰(Necto) 등 사업 설명을 두고서도 현란한 단어의 나열이라 혹평이 나온다.

시민 모임인 '대기업 복합쇼핑몰 유치 광주시민회의'는 19일 성명을 내고 "광주시가 공개한 국가지원형 복합쇼핑몰의 실체는 '메타N 콤플

렉스', '톱 오브 더 톱' 방식이라는 현란한 단어를 나열했으나 결론은 9,000억원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논평했다.

이들은 "대기업이 앞다퉈 진출을 선언하고 있으니 광주시는 관련법을 검토해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실효성 있는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면 되는 단계"라며 "뜬금없이 타당성에서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는 트램 설치를 연결해 국비 지원을 요구하니 황당하다"고 비판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 시내에 복합쇼핑몰을 세우겠다는 것은 대통령 공약으로, 광주로서는 절호의 기회가 아닐 수 없다. 이 기회를 광주 발전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깊이 고민하고 있다. 시민공감대·시민편의·광주 발전이라는 가치를 담아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용현 기자

## “정부, 김홍빈 대장 구상권 청구 취소해야”

### 광주 국회의원들 국위선양 예의 '영사조력법' 개정안 공동발의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은 19일 “정부가 청구한 김홍빈 대장 구조 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송강석·윤영덕·이병훈·이용빈·이형석·조오섭·김경만 의원(비례)과 정의당 강은미 의원(비례), 무소속 민형배·양향자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고 김홍빈 대장에 대한 외교부의 구상권 저지를 위해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지난해 7월 김 대장 실종 당시 수색과 구조에 들어간 비용 6,800만원을 최근 광주 시산업연맹에 청구했다.

외교부는 '재외국민이 자신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돼 있고, 외교부장관이 청구한 비용을 상환해야 한다'는 영사조력법 제19조를 근거로 구상권을 청구했다.

광주 의원들은 “김 대장의 등반은 개인 영리 목적의 아니고, 국가가 국위 선양을 인정한 만큼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며 “개정안에 정부 훈장 등을 받은 이가 국위 선양을 목적으로 활동하다 발생한 해외 위난 상환 비용 상환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장애인 세계 최초로 히말라야 14좌 완등에 성공한 김 대장의 공적을 인정해 체육훈장 1등급인 청룡장을 추서했다.

/서울=강병윤 기자



강기정 광주시장이 19일 오후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광주경제자유구역 투자기업 8개사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뒤 김진철 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기업 대표 등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 광주경제자청, 핵심산업 8개 기업 투자유치

565억·고용창출 150여명 규모

광주경제자유구역청은 19일 광주시청에서 국내 8개 기업과 투자액 565억원, 고용창출 150여명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투자협약 기업은 ▲동국성신(주) ▲쥘코란트 ▲한국축산데이터(주) ▲(유)성정글라스 ▲쥘넷은 ▲쥘잡종은넷 ▲쥘나눔세상 ▲엠투테크 등 8개 기업이다.

동국성신(주)은 인천에 소재한 전기전자 부품 제조기업으로 광주에 투자를 결정하면서

자동차, 2차전지 분야 신규사업 진출과 함께 신성장 산업분야 해외 수출도 확대할 예정이다.

쥘코란트는 이번 투자를 통해 광주 에너지밸리에 연구소와 공장을 신설하면서 차세대 도로조명 시스템의 인공지능 기술 및 연구 인력을 확보하고, 유럽 수출제품의 대량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축산데이터(주)는 AI융복합지구 투자를 통해 광주전남지역 농가에 디지털 가축헬스케어 매니저 솔루션을 제공한다.

(유)성정글라스는 삼성전자, 대우전자 등의 1차 협력기업으로 가전제품의 트렌드 변화와 수요 증가에 대비한 투자를 통해 광주의 우수인력 채용과 함께 유통망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쥘넷은, 쥘잡종은넷, 쥘나눔세상, 엠투테크(주)는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다양한 제품 및 소프트웨어에서 특화된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들로 광주경제자유구역의 인공지능 생태계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용현 기자

## 한춘옥 도의원, 축산물 무관세수입 철회 촉구

### “축산업 생산기반 흔들 것”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한춘옥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2·사진)은 19일 열린 제36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부의 축산물 무관세 수입 결정 철회를 촉구했다.

정부는 최근 쇠고기 10만톤, 닭고기 8만톤, 돼지고기 5만톤을 무관세 수입하기로 결정하고 오는 20일부터 연말까지 수입하기로 했다.

한 의원은 “정부가 축산업 사료값 폭등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등 다른 노력 없이 수입 축산물로만 의존하려는 폐단은 중단해야 한



다”며 “수입 축산물 무관세 조치로 인한 물가 안정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내 축산업 생산기반을 뒤흔들 수 있는 이번 결정은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축산농가는 생산비의 40~60%를 차지하는 사료가격이 지난해부터 각각 30%, 20%씩 두 차례 올라 채산성이 극도로 악화되면서 경영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오선우 기자

우리지역 광주·전남 제품  
지역인재 고용창출에 앞장서는 기업

air purifier **DK**

**스탠드형**  
사무실, 가정용  
어린이집, 유치원 특화제품

**벽걸이형**  
경로당, 병원, 노인복지시설  
사무실, 초중고 학교용 특화제품

**DK** 디케이 주식회사

소비자만족센터(구입 및 A/S)  
**1544-1154**